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6.9.(화) 6월 2주차 (제26-36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관세) USTR, 무역법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련 301조 조사 결과 발표 ····· 2
• (관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5
• (산업) 美, 첨단 AI 보안검증 행정명령 발표…혁신과 안보 간 균형 모색 ····· 8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EU,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10%는 부당하다고 주장 ····· 11
• (무역) WTO, 글로벌 상품무역 둔화 조짐에도 안정세 유지 ····· 11
• (통상) 美 수입업체, '긴급관세' 환급 집단소송 추진…정부와 환급 방식 갈등 ····· 12
• (북한) 북·중·러 협력 기반 경제 회복세, 제재 압박 영향은 완화 ····· 13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중국견제, 핵심광물, 무역정책 등 6건 ····· 14
• (행사) 애틀랜틱 카운슬, 허드슨연구소 등 2건 ····· 15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6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7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6.10(수)	• 5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May) •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상승률(CPI year over year)
6.11(목)	• 6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Initial jobless claims, June 6) • 5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Core PPI, May)
6.12(금)	• 6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Consumer sentiment(prelim), June)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관세) USTR, 무역법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련 301조 조사 결과 발표

- 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 10~12.5%의 국별 차등 관세 부과 제안
- 우리나라는 '제도·집행 미흡' 국가군에 포함 관세율 12.5% 대상
- 차주 '과잉공급(Overcapacity)' 관련 301조 조사 결과도 발표 임박

1. 개 요

□ 美 (USTR), 301 * (6.2)

*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미도입 또는 미집행 국가에 대한 301조 조사 결과 및 조치 제안」

• 60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 및 진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별로 10~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권고

*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 미도입집행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대상에 포함

- 현재 동 조치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절차가 진행 중인 제안(Proposed Action) 단계로, 향후 USTR의 최종 결정 및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

□ IEEPA

• 대법원의 IEEPA 관세 무효 판결(2.20)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무역법 122조 관세(10%)를 대체할 통상 조치 마련을 위해 USTR가 직권 조사 개시(3.12)

* 122조 관세는 법정 적용 기간(150일)에 따라 7.24 종료 예정

- 동시 개시(3.11)된 '구조적 과잉공급' 관련 301조 조사 결과도 발표 임박

2. 주요 조사 결과 및 권고 조치

□ ( ) 60 ,

• 해당 국가들의 정책 및 관행은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 상 '불합리한 무역관행'에 해당하며, 미국 사업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결론

• 우리나라도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국가군(54개국)에 포함

- 보고서는 "한국이 강제노동 자체는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와 같은 강제노동 수입 차단 체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평가

□ ( )

• △강제노동 수입규제 제도 존재 △집행 수준 △미국과의 약정 여부를 기준으로 교역국을 분류하고,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제안

〈강제노동 수입 규제 수준 분류 국가군 및 제안 관세율〉

구분	분류 기준	대상국가	제안 관세율
1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보유 (단, 집행 미흡)	캐나다, EU,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파키스탄 (6개)	10%
2군	미국과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도입 관련 약정 체결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9개)	10%
3군	부분적 수입규제 체계 운영	영국	10%
4군	수입금지 제도 미도입 및 미국이 인정하는 약정·규제 체계 부재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스위스, 노르웨이 등 나머지 국가 (46개)	12.5%

(*)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는 1·2군에 중복 포함

•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국의 모든 제품(All Products)이 추가 관세 대상이나, 부속서 A에 규정된 예외 품목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예외 품목* 선정 기준은 (1) 기존 232조 관세 적용 품목, (2) 미국 내 공급 확보가 어려운 원자재, (3)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 (4)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품목, (5) 관세 부과 효과가 낮은 품목 등

* 농축산물(소고기, 커피, 과일 등), 원자재(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화학제품(각종 기초화합물 등), 기타(서적 및 정보물, 기부 물품, 휴대수하물, 232조 관세 대상 품목)

- 한편, 일정 물량의 의류·섬유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섬유·의류 특별 메커니즘' (Textile Mechanism) 도입을 제안

〈부속서 A 관세 예외 품목 분류 요약 정리〉

분류	주요 품목	비고
에너지·연료	원유, 천연가스, LNG, LPG, 석탄, 코크스, 정제석유제품, 윤활유, 아스팔트 등	에너지 및 원재료
핵심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바나듐, 희토류, 구리, 아연, 주석, 몰리브덴, 텅스텐, 티타늄, 마그네슘 등	
광석 및 광물원료	철광석, 구리광석, 니켈광석, 코발트광석, 리튬광석, 망간광석, 각종 희토류 광석 등	
철강·알루미늄	철강 제품, 철강 파생제품, 알루미늄 제품, 알루미늄 파생제품 등	232조 관세 품목
자동차·자동차부품	승용차, SUV, 경상용차, 엔진, 변속기, 주요 자동차부품 등	
농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곡물,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사탕수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감귤 등	생필품 공급 안정 목적
수산·임산물	일부 수산물, 목재, 임산물	
화학제품	산업용 가스, 무기산, 무기염, 유기용제, 석유화학 기초원료, 화학 중간체	제조업 부담 완화
의약·바이오	의약품, 백신, 원료의약품(API), 바이오 원료, 의료용 화학물질	공중보건 영향 최소화
항공우주	항공기 부품, 엔진 부품, 항공전자장비, 우주항공 부품	국가안보
기타	서적, 신문, 잡지, 교육자료, 정보매체, 구호 물품, 기부 물품, 개인 휴대품	-

[자료] 관보게재 Annex A 분류 요약

- 작성자 |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USTR 보도자료(6.2), 301조 보고서 원본(6.2), 관보(6.2)

(관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행정명령(6.3)을 통해 미국의 통관·관세 집행 체계 전면 재정비
- 해외 수입자(Foreign IOR) 및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한 고강도 통관 규제 도입
- 공급망·원산지 검증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확대

1. 행정명령 개요 및 배경

□ , ‘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6.3.)

• △세관국경보호청(CBP) 집행 기능 강화 △수입자 관리 체계 개편 △공급망 정보 공개 강화 △원산지·관세 회피 단속 강화 등 통관 체계의 전면적 개혁 추진

- 특히, 해외 수입자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를 강화하고, 저가 수입품 및 전자상거래 기반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

□ ,

• 미국 정부는 △수입신고인(IOR) 허위 기재 △수입품 과소평가 △편법적 관세 회피 △강제노동 수입, 원산지 위반 등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 동 명령을 통해 ① 국가안보 강화 ② 적법 교역 촉진 ③ 관세 적시 징수 ④ 시스템 현대화 ⑤ 준법 체계 강화 ⑥ 투명성 증대 ⑦ 미국 소비자·경제 보호 등 목표 제시

2. 주요 내용

□ (IOR, Importer of Record) (180)

• 미국 정부는 수입신고인의 책임성과 법규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통관 과정의 추적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IOR 등록·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 예정

- ⑴ IOR의 최소 미국 내 자산 보유 또는 추가 보증보험(Bond) 확보 의무화
- ⑵ 수입신고인에 대한 최소 보증보험 기준 상향
- ⑶ 모든 정식통관 및 비정식 통관 전반에 대한 IOR 지정 의무 확대
- ⑷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예상 수입, 사업 연혁 등 정보 제출 의무화
- ⑸ 계열사 및 사업 관계 정보 공개 의무 부과
- ⑹ 미국 내 자산 보유 현황 신고 의무 도입

□ (Foreign IOR) (Informal Entry)

• 해외 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식 통관(Informal Entry) 활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 특히, 저가 수입품 및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에 따른 통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

• 해외 수입자의 정식 통관에 대해서도 다음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부과할 예정

- (1) 원칙적으로 연속보증보험(Continuous Bond) 사용 제한
- (2) CBP의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인증을 획득하거나, CTPAT의 검증을 받은 세관 브로커를 통한 수입신고 의무 등

〈Foreign IOR의 정의〉

◦ 개인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자

◦ 법인 :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미국 내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배적 실소유자가 아니거나, 상당한 규모의 미국 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 IOR (Good Standing) (180)

• 세관 기준 준수 이력·관세 납부 이력·계열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 등급 부여

- 불법 약물 등 수입 전력이 있는 IOR은 자격 박탈, 브로커를 통한 우회 수입도 금지

□

• 수입자는 △제조업체 식별정보 △제품 모델번호 및 사양 △원재료 구성 정보 △생산방식 △공급망 구조 등 상세 공급망 정보를 CBP에 제출하도록 의무

• 또한, 강제노동, 경제 제재 회피, 원산지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인증* 의무를 부과할 예정

* CAATSA(적성국 제재법), 밀수 관련 연방법, 기타 CBP가 지정하는 통상·관세 관련 법령

□ (90)

• 해외 수출자가 자국 세관에 제출한 자료를 미국 세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도입

- 수출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수출신고 내용을 교차 검증함으로써, 관세 절감을 위한 저가신고(Undervaluation) 및 허위신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

□

• 중점 단속 대상 지정

- △강제노동 생산품 △허위 품목분류(Misclassification) △저가신고 △우회 수출(Illegal Transshipment) 등을 조사 대상 우선순위로 격상

• 관세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정)

- △최소 제재 금액 하한선 도입 △최소 청산 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하한선 신설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감면 제도 완전 폐지 등 제도 강화

• 불법 수입품 압류·폐기 절차 신속화

- 위법·불법 물품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압류 및 폐기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자발적 포기 절차 간소화 △고위험 화물 보증 강화 △제3자 폐기 허용 등 추진

• 통관 브로커에 대한 책임 강화

- 미협조, 반복 위반 고객 대리, 실사 의무 불이행 브로커에 최고 수준의 제재 적용

3. 시사점

□ •

• 중국산 우회 수출과 온라인 기반 저가 수입을 집중 관리하려는 정책 기조 반영

□ •

• 미국 수입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법·보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수입신고인(IOR) 관리 체계와 통관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 필요

- 특히 미국 내 수입자 역할을 수행하는 현지법인 및 계열사의 경우 Good Standing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강화되는 통관 요건에 대비 요망

□

• 주요 리스크 요인은 △공급망 관련 자료 제출 부담 확대 △통관 심사 및 감사 증가 △미국 현지법인 실체성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 등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백악관 보도자료(6.3), 행정명령(6.3), CBP(6.3), 블룸버그(6.3)

(산업) 美, 첨단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발표…혁신과 안보 간 균형 모색

- 트럼프 대통령, 첨단 AI 모델의 사이버·국가안보 위험 점검을 위한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서명
- CFR, 이번 조치를 제한적 보안 검증 체계로 평가하되 실질적 방어 효과는 불투명
- 업계는 자발적 협력 방식에 긍정적이나, 검토 기준·정부 평가 역량 등 실효성 우려도 제기

1. 개 요

□ , AI 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6.2)

• 동 행정명령은 첨단 AI 역량이 새로운 국가안보 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AI 혁신을 유지하면서 안보 위험을 관리하려는 조치

□ AI ,

• 미국의 지식재산을 적대국의 악용·탈취로부터 보호하고, 첨단 AI 기반 역량을 육성하는 것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명시

※ Anthropic의 Claude Mythos Preview(4월 공개)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악용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행정명령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나, 당초 90일 검토 기간을 담은 초안은 중국 대비 AI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5월 철회, 이번 서명본에서 30일로 단축

2. 상세 내용

□ AI ·

• 행정명령은 AI 기업이 첨단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연방정부가 최대 30일간 해당 모델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검토 대상은 모든 AI 서비스가 아니라, 사이버·국가안보 위험이 큰 "첨단 AI 모델(covered frontier models)"에 한정

- 기업 참여는 자발적이며, 행정명령은 AI 모델 개발·공개·배포에 대한 정부 허가제나 사전 승인제로 해석될 수 없다고 명시

-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AI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AI가 제기하는 새로운 사이버·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AI를 활용한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

- 재무부 주도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여러 기관·기업의 정보를 모아 취약점 대응을 조율하는 창구인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를 구축

- AI 기업·기술기업·핵심 인프라 운영자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고 패치(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배포를 조율할 계획

- 국가안보국(NSA) 등 관계 기관은 첨단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과 잠재 위험을 평가하는 비공개 벤치마킹 절차를 마련해 검토 대상을 식별할 계획

3. 현지 반응 및 전망

□ (CFR), ' AI '

• 혁신 촉진 기조에서 일부 벗어나 제한적 보안 검증 필요성을 인정한 조치로 평가

- 바이든 행정부 AI 규제 폐지 후 혁신 촉진을 강조해 왔으나, 첨단 AI 모델의 사이버 악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

-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닌, 사이버·국가안보 위험에 한정한 자발적 민관 협력 기반 보안검증 체계 도입으로 해석

• 다만 행정명령의 실질적 방어 효과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평가

- 어떤 AI 모델을 검토 대상으로 지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기준이 좁으면 위험 모델이 검토 없이 공개되고 넓으면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딜레마 존재

- AI로 취약점을 찾아내더라도 패치 적용이 더 큰 난제로, 자원이 부족한 핵심 인프라 운영자에게는 기초적인 보안 관리 미흡이 더 현실적 위협으로 지적

- 연방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사이버보안 인력을 대폭 감축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보강 캠페인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

- 또한 정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평가할 전문 인력과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과제로 제시

□

• AI 업계는 혁신과 안보 간 균형을 맞춘 절충안으로 긍정적 평가

- 주요 AI 기업들은 정부와의 사이버보안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델 출시 전 정부 승인 의무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로이터통신)

- AI 안전과 혁신 간 균형을 맞춘 "중요한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검토 참여가 AI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NYT)

• 자발적 방식의 한계와 의무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시각도 제기

- 일부 업계에서는 자발적 검토 참여가 모델 출시를 지연시키고 향후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NYT)

- 의무 규정 없이는 위험한 AI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일부 의원은 "AI 개발의 무법지대를 조성하는 실망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WSJ)

- 비공개 벤치마킹 기준으로 민관 간 공동 이해 형성이 어렵고, 자발적 참여 방식 특성상 출시를 서두르는 기업이 검토 절차를 건너뛸 유인도 존재(Atlantic Council)

• 행정부·의회 내 이견 속 세부 이행 방향이 향후 핵심 변수

- 트럼프 행정부 내 AI 규제 강화파와 혁신 우선파 간 갈등 속에 나온 절충안으로, AI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의회 내 이견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상존(WSJ)

- 향후 검토 대상 모델 기준·클리어링하우스 운영 방식·기업 참여 수준 등 세부 이행 방향이 행정명령의 실질적 영향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CFR)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예나
▪ 자료원	백악관(6.2, 6.2), CFR(6.2), 로이터(6.2), NYT(6.2) 등 현지 언론 및 싱크탱크 종합

미국 경제통상 동향

(관세) EU,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10%는 부당하다고 주장

- **미국, EU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301조 10% 관세 부과 발표**

- 미 무역대표부(USTR), 301조 조사에서 EU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10% 관세 부과 발표(6.3)

- **EU는 자체 강제노동 수입 금지 규정에도 불구, '10% 관세는 부당하다'라고 반발**

- 세프초비치 EU 경제·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10% 관세는 부당하다고 반발

  * EU는 강제노동 규정을 공식 발효('24년 12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내 판매·수입·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공급망 전반 기업의 실사 의무 부과, '27년 12월 14일 시행 예정

- USTR 그리어 대표는 "법 제정만으로 불충분, 실효적 집행 증거가 필요하다"고 반론하고, 10% 관세는 합의된 1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턴베리 합의*에 부합한다는 입장

  * 미국과 EU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은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 상한 15% 설정,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미국산 수산물·농산물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 허용에 합의('25년 7월)

- 또한, '강제노동 관세 10% 및 추가 과잉생산* 관세 합산 시에도 턴베리 합의 15% 상한 내 조정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합의 이행 준수 재확인

  * USTR은 과잉생산 관련, 중국·EU·일본·한국 등 포함 16개국 대상 별도 301조 관세 부과 예정

- 세프초비치 EU 경제·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EU 간 관세 상한선 15%는 예외조항 포함 모든 관세를 합산한 실효세율(all-inclusive) 기준'임을 재차 강조

▪ 자료원 | 폴리티코(6.4), 인사이드(6.4)

(무역) WTO, 글로벌 상품무역 둔화 우려 속 안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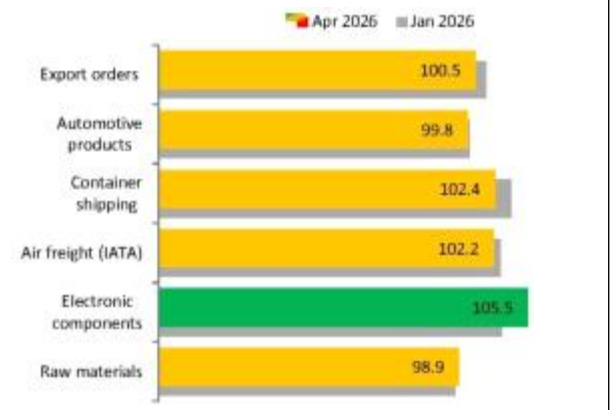
- **WTO는 '26년 상반기 글로벌 상품무역이 중동 분쟁 및 에너지 가격 부담에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으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WTO 상품무역 선행지표는 4월 101.7로 1월(102.3) 대비 하락하며 교역 둔화 가능성을 나타냈으나, 기준선 100을 상회해 세계 상품교역량은 추세 이상 수준을 유지

-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운송 차질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자부품 수요 증가가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

- 하위지표별로는 전자부품·운송 부문이 기준선을 상회하며 교역 회복을 나타낸 반면, 자동차제품·농업 원자재는 기준선을 하회해 부문별* 회복세 차별화

* 전자부품 105.5, 컨테이너 운송 102.4, 항공화물 102.2, 수출주문 100.5, 자동차제품 99.8, 농업 원자재 98.9

〈WTO 상품무역 선행지표 및 교역량 추이〉	〈WTO 상품무역 선행지표 부문별 동향〉
	
[자료] WTO, Goods Trade Barometer	[자료] WTO, Goods Trade Barometer

- **WTO는 '26년 세계 상품무역 증가율을 1.9%로 전망했으나, 중동 분쟁 장기화 시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증가율이 1.4%까지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

▪ 자료원	WTO(6.5), 로이터(6.5)

(통상) 美 수입업체, '긴급관세' 환급 집단소송 추진…정부와 환급 방식 갈등

- **美 수입업체들은 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긴급관세(IEEPA)' 환급과 관련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추진하며, 개별 소송을 요구하는 법무부와 갈등 심화**

- 이번 사안은 환급을 한 번에 처리할지(집단소송) 또는 기업별로 따로 소송할지(개별 소송)를 둘러싼 분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 및 환급 지연 가능성 확대

-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와 통관 행정의 예측 가능성에도 영향 예상

- **관세 환급 범위·절차를 둘러싼 법적 분쟁 본격화, 환급 방식 결정이 핵심 쟁점**

- 수입기업들은 환급 시스템(CAPE) 적용 확대를 위해 집단소송 추진, 개별 소송 요구에 따른 비용·행정 부담 문제 제기

* 대법원이 2026년 2월 긴급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실제 환급 범위와 방식으로 쟁점 확대

- 미 법무부는 “최종 통관 건은 개별 소송 필요” 입장이나, 기업들은 일괄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 법원의 ‘전면 환급’ 명령에 대해서 항소 진행 중

- 향후 집단소송 승인 여부 및 항소 결과가 확정된 수입 건 재정산 가능 여부, 환급의 범위와 방식, 통관 관행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자료원 | 인사이드(6.2)

(북한) 북·중·러 협력 기반 경제 회복세, 제재 압박 영향은 완화

•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현지 언론은 북한 경제 회복 및 구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

- 미 현지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확대 및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기반으로 최근 수년간 경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 평양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기반 택시 호출·QR 코드 결제·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택·병원·온실단지·관광지 등 건설·개발 사업도 지속 추진

-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병력 지원 대가로 외화·석유·식량·군사기술 등을 확보했으며, 중국과의 교역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

• **경제 성장은 평양 중심으로 지역별 격차 존재, 중·러와 협력으로 제재 압박 일부 완화**

- 평양 등 일부 지역은 소비·서비스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은 빈곤과 영양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등 경제 회복 효과는 지역별로 불균형

- 위성 자료상 야간 조도 및 차량 이동 증가, 원유 저장시설 확충 등이 관측되며, 북한 내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비공식 시장과 밀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영 유통망과 생산 체계를 확대하는 등 국가 주도의 경제관리 기조 강화

- 현지 언론은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제재 압박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무역 구조·러시아 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

▪ 자료원 | WSJ(6.7), NYT(6.8)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중국견제 (6.2)	H.R.9092 H.R.9093 (하) (6.2)	Scott Fitzgerald (공)	**〈지역 적대국 투자 차단(TRAIN) 법안〉** ▪ 국무부가 비적대국 파트너 정부가 중국 등 적대국의 투자나 대출을 수용하기 전에 법적·재정적 위험을 분석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글로벌 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인프라 개발(BRIDGE) 법안〉** ▪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활용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약화 활동 범위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 전략을 제출하도록 요구
중국견제 (6.4)	H.R.9161 H.R.9162 (하) (6.4)	Haley Stevens (공)	**〈알루미늄 공급망 안전법 (Secure Aluminum Supply Chains Act)〉**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우려국가 및 산하 기관으로의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과 관련한 국가안보 우려 조사 요구 **〈미국인을 중국산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Protecting Americans From Chinese Cars Act)〉** ▪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이 미국에 반입 금지 ▪ 중국산 차량의 중요 기반 시설 감시 및 시장 잠식 방지
경제통상 (6.8)	H.R.3429 (하) ('25.5.15)	Ami Bera (민)	**〈미·한·일 3자 협력법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ct)〉 - 하원통과** ▪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및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여, 공동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 3자 회의("미·한·일 국회 간 대화")를 설립하도록 요구
핵심광물 (6.8)	H.R.7037 (하) ('26.1.13)	Young Kim (공)	**〈해외 광물 투자 및 핵심 에너지 동맹 네트워크 개발법 (Developing Overseas Mineral Investments and New Allied Networks for Critical Energies Act)〉 - 하원통과** ▪ 국무부가 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 주도 권한 부여하며, 핵심 광물의 채굴·가공·정제 관련 투자 프로젝트 지원 규정. 미국 및 동맹·파트너국의 국가안보·경제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MSP 사업을 우선 추진
예산 (6.5)	S.2 (상) ('26.5.20)	Lindsey Graham (공)	**〈Secure America Act (미국 안보법)〉 - 상원통과** ▪ 국토안보부(DH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 집행 및 관련 활동을 위해 2029 회계연도까지 예산을 지원
무역정책 (6.8)	S.4702 (상) (6.8)	Ruben Gallego (민)	**〈중국 보조금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법(China Subsidy Response and Export Competitiveness Act)〉** ▪ 미국 수출입은행(EXIM)의 중국 및 혁신수출 프로그램(CTEP)을 강화하여,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한 미국 수출기업 지원 및 혁신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추진

* 6월 9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Atlantic Council	6/17 12:00 pm	〈The IMF's Dan Katz on stablecoins, tokenization, and cross-border payments〉 ▪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논의하며,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 국경 간 결제,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IMF의 역할을 논의	링크
Hudson Institute	6/18 3:30 pm	〈Advancing American Interests through Trade, Investment, and Commercial Diplomacy: A Conversation with Under Secretary of Commerce William Kimmitt〉 ▪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투자 전략이 산업정책, 디지털 서비스, 전략적 경쟁 등 분야에서 동맹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윌리엄 키밋 상무부 차관과 논의	링크

* 6월 9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he Public Now Backs Nuclear Energy. What Will It Take to Make It Happen? ([미국 250주년 특집 경제 시리즈] 원전지지 여론 확산...남은 과제는 현실화)
	미국 원자력 산업은 최근 전력 수요 증가, 기후 위기 등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고 있어. NASA는 2030년까지 달에 원자로를 배치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상업용 핵융합 발전을 계획하고 있어
The Washington Post	White House will be closed to reporters during UFC fight — unless UFC lets them in (트럼프 생일 기념 UFC 경기...취재하려면 UFC 승인 필요해)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및 미국 250주년에 맞춰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UFC 경기 관련, UFC는 경기장이 설치된 사우스론에 "매우 제한된" 기자만 출입을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The New York Times	Who Will Actually Thrive in the Hybrid A.I.-Human Work Force (AI 협업시대의 핵심 인재상은?)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하이브리드 노동환경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단순 지식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창의적 사고와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상이 대두되고 있어
CNN	NASA reveals Artemis III crew that will take the next big step on its journey back to the moon (NASA,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3호' 비행사 공개)
	미 항공우주국은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로 랜디 브레스닉, 루카 파르미타노, 안드레 더글러스, 프랭크 루비오를 선정해. 아르테미스 3호는 플로리다에서 발사될 예정
USA Today	Trump says US 'must' respond after Iran shot down an American helicopter (트럼프, 이란의 미군 헬기 격추에 "반드시 대응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한 아파치 헬기를 이란이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시사해. 헬기 조종사는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져

* 미국 동부 시간 6월 9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2026.5월
US26-14	美 하원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패키지 의결 동향 및 주요 내용	2026.5월
US26-13	美『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5월
US26-12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 개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4월
US26-11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6.4월
US26-10	제14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4월
US26-09	美, 과잉공급·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3월
US26-08	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2026.3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5.28.		
2026.2.6.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